# 「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」 안건 자료 (요약본)

**제1호 심의안건** **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** (요약)

## □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

○ 「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23~'27년)」에 따라 2025년 외국인정책 **시행계획 수립** 필요 (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)

**<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23~'27년) >**

❖ **비전 :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**

❖ **정책목표**

① **【경제】**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, ② **【안전】**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, ③ **【통합】**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, ④ **【인권】**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, ⑤ **【협력/인프라】**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

○ 추진 경과

- '24. 7. 31. '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출 요청(중앙부처·지자체)
- '24. 11월~12월 '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취합 및 정리

※ **(법무부)** 7월말까지 「시행계획 작성지침」 정부부처·지자체 송부→ **(정부부처·지자체)** 10월 말까지 법무부 제출 필요(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4조)

## □ 대상기관

○ **(21개 중앙행정기관)** 14부·1위원회·6청

※ 19개 위원부처 중 기재부, 국조실은 과제 없으며, 비위원부처인 해경청, 국세청, 질병청, 재외동포청은 추진과제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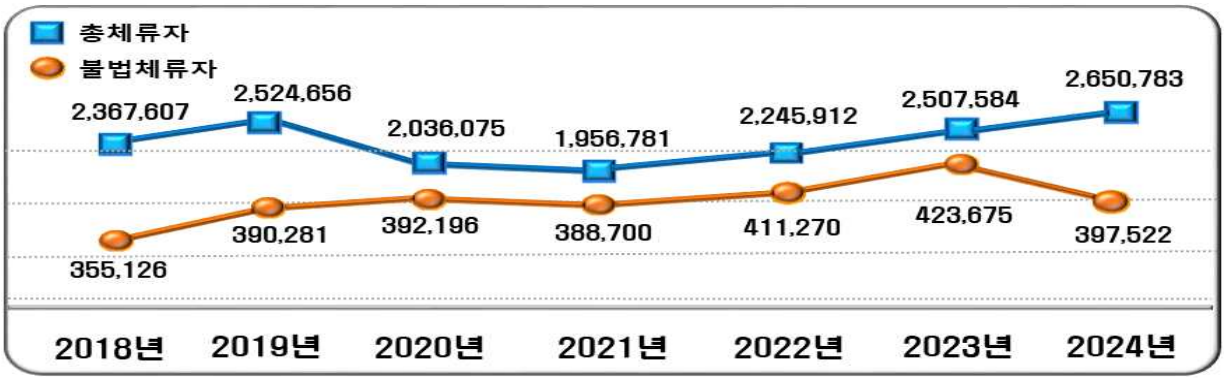
○ **(17개 광역지자체)** 1특별시·1특별자치시·6광역시·3특별자치도·6도

## □ 정책목표별 주요 과제

○ (경제) **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례화,** 첨단분야 인재 **「탑티어 비자」** 신설, **「청년드림비자」** 신설, **국내 체류외국인 가사·육아 분야 시범운영** 지원, **「광역형 비자」 시범운영, 「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」, 지역특화비자 대상지역 확대**(인구감소 관심지역 18개),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,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 확대(교육부), K-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확대(문체부) 등

○ (안전) **불법체류 감축 활동 지속**(정부합동단속, 자진출국기간 운영), **전자입국신고서 도입,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고도화,** 외국인 부동산거래 조사 강화(국토부), '범죄예방 강화구역' 지정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(경찰청), 불법고용 등 고용주 계도 강화(고용부) 등

<단속강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감 추이>




○ (통합) **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,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, 동포 체류자격 통합 추진, 「동포체류지원센터」 법제화,** '다누리 배움터'를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(여가부), 문화다양성 정책 지속 추진(문체부), 이민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화(고용부),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진로상담 등 지원(여가부·교육부),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(초·중등) 지정 및 컨설팅 추진(교육부) 등

○ (인권) **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도입 및 중립적 보호위원회 신설,** 난민의 국내 정착 현황조사를 통한 정책개발,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, **외국인고용 사업장 근로기준법·산업안전관계법 지도·점검**(고용부), 폭력피해 보호시설(33개소) 및 상담소(9개소) 운영(여가부) 등

○ (협력/인프라) 중앙·지방 협력강화를 위한 **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법제화,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,**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간 협력 강화 및 통합운영 지속 추진(법무·고용·여가부), ODA 사업(페루 이민청 이민행정 서비스 개선) 시행(법무부·KOICA) 등

## □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

○ **(과제)** 총 1,504개(중앙 157개+지자체 1,347개)

○ **(예산)** 총 6,961억(중앙 3,662억+지자체 3,299억)

제2호 보고안건 **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**

## 1 해외 우수인재 유치

### 1.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대상 Top-Tier 비자 신설

○ (추진 배경)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유치 촉진을 위한 **혁신적인 비자 발급 편의 및 체류혜택 제공** 필요

○ (주요 내용)

① **AI·반도체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**(학술, 연구, 산업, 창업 등)가 **취·창업한 경우, 거주(F-2) 비자***를 부여하고 향후 **영주권**까지 취득 지원

* (요건) 세계 100대 대학 석박사,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, 일정 소득 이상 등

▪ **(혜택)** 전자비자 신속 발급, 부모·가사보조인 초청 허용,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, K-Tech Pass*와 연계한 정착지원 등 **차별화된 혜택 제공**

**【*산업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(K-Tech Pass)】**

□ **(지원대상)**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("첨단인재법")」의 **첨단기업 종사 우수 해외인재**

* 첨단산업: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·바이오, 로봇·방위산업('25.上 추가)
-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, 미래모빌리티 등 추가 예정 (산업부 고시 개정)

▸ **첨단인재법의 우수 해외인재(K-Tech Pass 발급자)** ⇌ **최우수인재 거주비자(F-2)** 대상자

*「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」 신설 예정(3월)

□ **(지원사항)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(F-2) 발급** 및 각종 **정주지원**

▸ **(세제)** 최대 10년간 **근로소득세 50% 감면**

▸ **(교육)** 자녀의 **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**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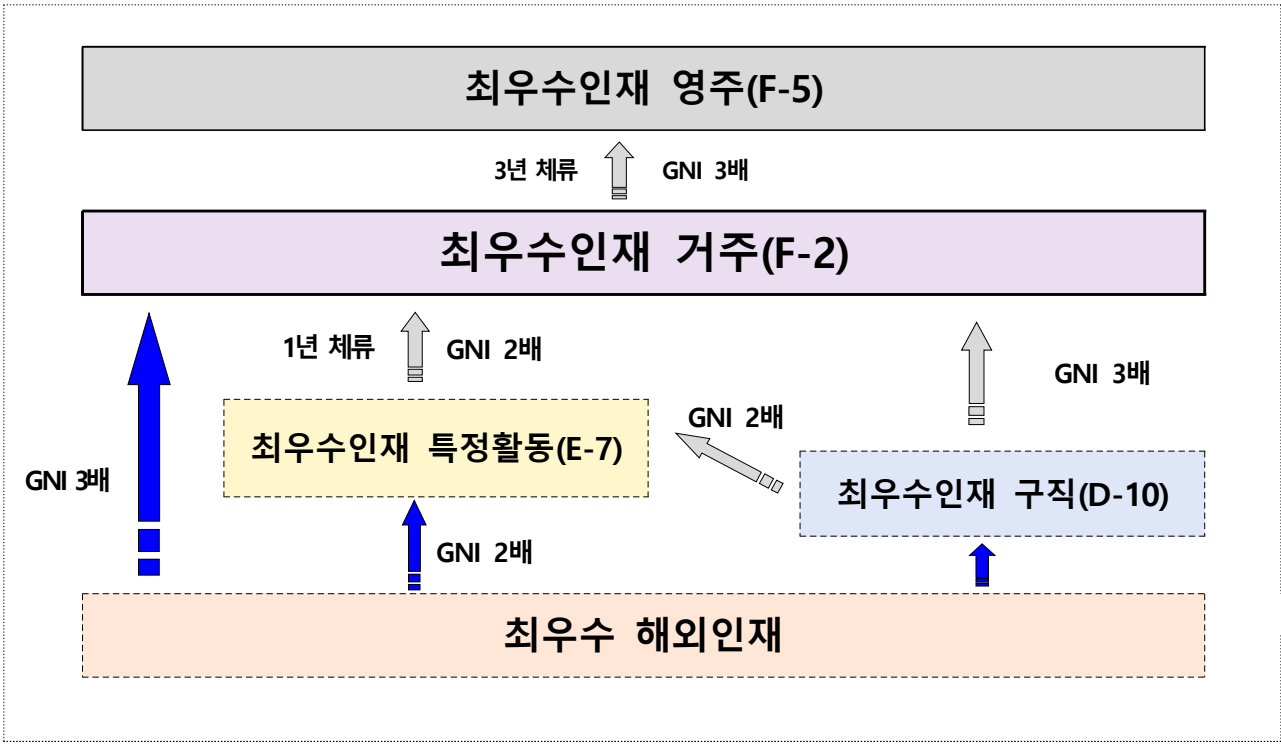
▸ **(주거)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**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(현행 2억원 → 개정 5억원)

▸ **(정착)** 금융·통신서비스 개설, 전입신고 등에 **전담기관 동행·안내 서비스** 제공

②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* 이상은 **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'구직(D-10-T)' 비자로 2년간 자유로운 취업탐색·준비활동 보장**

○ (향후 계획) '25. 1분기 탑티어 비자발급 지침 마련 및 시행

< 탑티어 비자 체류자격 체계도 >




## 2. 글로벌 청년인재 교류를 위한 청년드림비자 신설

○ **(추진 배경)**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·주요 경제협력국 중 시범실시 대상 국가의 청년에게 **「가칭청년드림비자*(Youth's Dream in Korea)」를 발급하여 지한(知韓)그룹 양성**

* 문화체험, 어학연수, 취업활동 등 가능

○ **(운영 방안)** 법무부시범 지자체 공모('25. 2분기) → 지자체연수·프로그램 설계('25. 2분기) → 법무부비자발급 및 입국('25. 하반기)

※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국가 출신의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

○ **(활용 방안)** 청년드림비자 활동 종료 후 ①인턴십 기업 정규취업을 통한 국내 정착 또는 ②본국 귀환을 통해 양국 상생 발전에 기여

## 2 현장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설계

### 1. 지자체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광역비자 시범운영

○ **(추진 배경)** 이민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**유입단계부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이민자 도입** 필요

○ **(주요 내용) 유학(D-2), 특정활동(E-7) 자격 대상**으로 **법무부가 광역비자 요건 등 설정 ⇒ 광역지자체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마련 ⇒ 심의위원회(위원장 : 법무부차관)에서 최종 결정**

-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광역비자 시행 여부를 정하고, 주기적 평가를 통해 정식 운영 여부 결정

○ **(향후 계획)** '25. 2월~3월 대상 지자체 선정 → '25. 3월 시범운영 개시 → '25. 상반기 광역비자 정식사업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

### 2. 경제계·지자체 수요 반영을 위한 비자·체류정책 제안제 시행

○ **(추진 배경)** 경제계·지자체 등 이해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맞춤형 도입 등을 위한 **수요자 기반의 유연한 비자 발급 프로세스 구축**

○ **(주요 내용)** 1단계 **경제·산업계**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 **비자·체류정책 수요 제기, 소관부처 및 지자체**가 **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 ⇒** 2단계 법무부 자체 **민관심의기구***에서 **심사**** **⇒** 3단계 **법무부**가 비자·체류정책 제도개선 여부 **최종 결정**

* 가칭 「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」로,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과 경제분야 등에 학식·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

** 국가 장기계획, 경제·사회정책과의 부합성, 국민고용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, 불법체류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

○ **(향후 계획)** '25. 3월 제1회 비자·체류정책 협의회 개최* → '25. 7월 반기 1회 협의회 정례 개최

* 항해사·기관사 등 해기사(해수부), 자동차 판금·도장 정비원(국토부) 등 우선 안건으로 검토 예정

**제3호 보고안건**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**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**

## 1. 추진 배경

○ 외국인이 증가하고 계절근로자·이주배경학생 등 체류 유형도 다변화됨에 따라, **다양한 교육 수요**를 충족하기 위해 **사회통합교육 개선 필요**

## 2. 정책 환경 및 문제점

○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발생, 외국인 산재 피해 증가,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 등의 **문제를 반영한 체계적 교육 부족**

○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통된 내용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, 다원화된 체류 유형을 반영한 **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**

○ 4세대 이후(1945.8.15. 이전 출생자를 1세대로 정의) 동포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, 정체성 약화 등을 고려한 **동포 맞춤형 교육 필요**

## 3. 주요 추진과제

○ **(인권보호·범죄예방)** ❶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(인권보호 등 교육) 이수 인센티브 도입 및 이수 의무화 시행, ❷조기적응프로그램 내 산업안전·범죄예방 교육과정 신설

○ **(맞춤형 사회통합교육)** 입국 前 외국인, 이주배경학생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 강화

- **(입국 前)** 현지 정착지원 설명회 개최, 영상교육자료 제작·온라인 배포, 조기적응·사회통합프로그램 현지 운영 등 추진
- **(이주배경학생)**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·이민자 멘토단 등이 **초중고교에 찾아가서** 이주배경학생에게 조기적응·진로진학 등 교육 실시
- **(유학생)**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**'대학 연계 과정'**을 활성화하여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
- **(외국인 근로자)** 숙련기능인력(E-7-4) 비자 취득 대상자가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및 산업현장에 사회통합프로그램 **특별반 편성·운영**

○ **(동포 대상 사회통합 강화) 동포 체류자격(H-2, F-4)을 통합**하고, 우수 청년 동포 유입 촉진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·체류·국적 상담 등을 포함한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**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추진**

**제4호 보고안건** **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·도입방안(법무부·복지부 협업과제)**

## 1. 검토 배경

○ (배경)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·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, 전문 돌봄인력 공급 저변을 확대하여 국민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마련 필요

○ (현황) ①'28년 기준 요양보호사 약 11.6만 명 부족 예상(수요의 15% 수준), ② 전체 요양보호사 근무자 중 외국인 비중은 약 0.9%에 불과

* **(요양보호사 부족 규모)** ('25) -3,762 (명) → ('26) -43,447 → ('27) -79,020 → ('28) **-116,734**

** **(외국인 근무자) 전체 근무자 646천 명 中 5.6천 명(0.9%)**

## 2. 추진 방향

###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「전문연수 과정」 시범 운영

○ (추진방향)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돌봄인력을 양성하는 「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」 신설

- (현지선발·국내연수) 국가자격·전공·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후보생 선발* → "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" 이수

* 돌봄분야(사회복지·간호 등)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소지자 우대, 법무부와 복지부가 협업하여 돌봄 관련 우수 소양을 갖춘 인원 선발·평가 기준 마련

- (실습·취업) 우수기관 연계 현장실습 및 자격 취득 → 취업 및 정착

### 2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「대학 학위과정」 신설

○ (추진 방향) 광역지자체-대학 협업 체계를 통해 유치·교육 등 유학생 요양보호사 학위과정부터 취업·정착까지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·지원

- (법무부) 운영지침(훈령) 수립 등 제도 기반 및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, 비자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성과정 운영 지원
- (복지부) 양성대학 선정 기준 수립, 교육과정 설계, 양성과정 관리 등
- (지자체-대학)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, 자격 취득 지원, 취업 연계 등 책임성 있는 양성과정 운영

## 3. 추진 일정

○ ('25. 하반기) 요양보호사 전문연수생 선발

○ ('25. 하반기)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